

파탄난 민생경제를 바로 잡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1. 기업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들을 확 풀겠습니다.

- 기업이 국내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풀겠습니다.
- 정부는 최소한의 감시기능과 기업 지원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국내 기업에 역차별적인 규제 폐지
 - 투자 및 국내 경제 활성화 촉진
 - 심각한 자본의 해외 유출 대응 및 적대적 M&A 방어
 - 일자리 창출

□ 공 약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를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 세계에서 유일하고 기업의 직접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
 -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 채권금융기관 및 시장의 간접 규제
 - 기업의 투명 경영 활성화 지원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겠습니다.
 - 국토균형발전 차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선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

2. 신용불량자 문제를 ‘바로 내 문제, 우리집 걱정거리’ 처럼 생각하고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 필요성

- 약 300만명의 신용불량자 및 직계가족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4인 가족 기준시 순인구 중 1/4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셈
 - 핵심은 일자리 창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신용불량자라 차단되지 않도록 지원
 -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력(노동력) 확보에도 중요

□ 공 약

-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국가지원을 하겠습니다.
- 신용불량자 구직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신용불량자 New start!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 스스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지원
 - 신용회복위의 책임과 실질적인 지원을 촉진하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률개정안」 제출

3.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세계적 수준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취약
 -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 시장 행위 상시 감시
- 작지만 세계적인 중소기업 육성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수과제
 - 중소기업도 신소재, 신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공 약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R&D 비용에 대해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겠습니다.

○ 구매대금의 어음결제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남용 등 경쟁법 위반에 대해선 상시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하겠습니다.
- 당내에 신고가 간편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 중소기업 R&D 비용에 대한 세제 및 금융 등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구매대금의 어음결제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현금결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조세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 서민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택시업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어 택시 기사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방안이 필요
- 업계에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만으로는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 운송 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음
-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예산 부족을 문제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음
- 경형 승합차와 경형 화물차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경형 승용차와 달리 면세 규정이 없음

□ 공 약

- 영업용 택시에 대한 LPG 특소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장애인 차량 LPG에 대해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교육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경형 승용차 및 경형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 필요성

- 영세자영업자의 면세점이 근로소득자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여 면세점이 지나치게 낮은 실정
 - 4인 가족 면세점은 인적공제 1인당 1백만원, 표준공제 60만원으로 460만원에 불과

□ 공 약

- 영세자영업자의 면세점을 4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현행 보다 약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서민부담을 경감하는 소득세제를 만들겠습니다.

□ 필요성

- 급증하는 서민부담을 위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조세원칙 정립
-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서민경제의 가처분소득 증대 필요
 - 조세부담율 : 18.0% ('97년) → 19.5% ('04년)
 - 국민부담율 : 21.0% ('97년) → 24.6% ('04년)

□ 공 약

- 소득세율을 2% 인하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추진 중에 있습니다.

4. 법인세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 필요성

- 어려운 경제로 일자리 창출 핵심인 중소기업 기반이 붕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취하겠음
- 대부분의 선진국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음

□ 공 약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겠습니다.
 - 1억원 이하 13%·1억원 초과 25% → 2억원 이하 10%·2억원 초과 25%로 인하·조정

□ 추진방안

-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추진 중에 있습니다.

5. 거래세를 현실화하여 자산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도모하겠습니다.

□ 필요성

-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원칙이 훼손되어 자산시장이 왜곡되고 있음
 -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
- 취득세와 등록세는 중복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

□ 공 약

- 등록세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추진 중에 있습니다.

6. 어음 세액공제제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는 물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세액공제 허용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됨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동일한 세액공제 기준은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을 감안할 때 조세의 형평성 등에서 문제점이 있음

□ 공 약

- 세액공제 대상 구매대금의 결제시기를 30일 이내로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 혜택 부여
(대기업 0.4%, 중소기업 0.5%)

□ 추진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추진 중에 있습니다.

7.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공 약

- 세원포착이 잘 안되는 전문직·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
- 탈세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

□ 추진방안

-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세무조사 강화 및 처벌 강화 등 제재수단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5년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율은 4.35%(99천명)로 심각한 상태인 반면, 2006년 1월 현재 실업율은 3.7%(878천명)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
 - 이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작업환경과 복지 수준, 저임금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
- 중소기업 환경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등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할 필요

□ 공 약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생산현장 환경개선 및 생산공정 개선사업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기재직 유인을 위한 근로자 자녀학자금을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 공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겠습니다.
- 여성인력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2. 규제개혁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필요성

- 공장 신·증축 관련 각종 규제로 창업과 설비투자 부진
 - 회사 설립기간 : OECD 평균 19일, 한국 22일
- 창업과 관련된 규제와 공장설립 절차를 개선,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하여 창업을 촉진할 필요

□ 공 약

- 창업 관련 규제개선과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회사 설립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상법 개정을 통한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검토
 - 회사 설립 시 각종 공증서류 간소화 추진
-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 신설 또는 변경되는 인·허가를 일괄의제 처리대상에 자동 편입
 - 개별입지내 소규모 공장설립 제한 업종 완화
 - 중소기업 및 부품·소재기업 창업시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3.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필요성

-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담보위주 대출관행 등으로 중소기업 신용대출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대한 제약이 지속
- 기술과 사업성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 공급 체계를 개선할 필요

□ 공 약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기술성·사업성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기술평가 모델을 모든 정책자금에 확대 적용하여
 - 정책자금 직접대출 비율을('05년 36%) 2007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 신용대출 비율을('05년 11.7%) 2007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 한미 FTA 등 대외무역 개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필요성

- 한·미 FTA, 한·일 FTA 등 대외무역 개방정책은 국가 전체를 위해 필요한 전략이나, 새로운 무역질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결과 피해를 입는 업종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순발력과 적응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 있음
-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통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제출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률」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후속조치들은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공 약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현재 운영중인 '한나라당 한·미 FTA대책특위'를 통해 국익 극대화 전략 수립 및 피해예상 분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세제지원 추진
 - 사업전환 자금지원 및 전담 지원센터 설치로 단계별 지원체제 구축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재래시장의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과 경영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 필요성

- 재래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현재 점포당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는 등 재래시장이 여전히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재래시장의 경쟁력은 재건축, 노후시설물 정비 등의 하드웨어적 측면과 마케팅, 재고관리, 영업기법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현대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하나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여건을 감안,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공 약

-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재래시장 경영혁신 사업 예산이 2007년부터 매년 10%씩 상향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006년 예산 249억(일반회계)
-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자체와 상인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예산 편성으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도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시설현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 * 2006년 예산 1,228억원(균특회계)

2.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필요성

-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시장공략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도시 중심상권이 쇠퇴하면서

- 도심공동화가 발생하고 중소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 신빈곤층으로 전락
- 중소상인들이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도시 중심지의 핵심상권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

□ 공 약

-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법안」 제정을 통해 핵심상권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필요성

-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은 대다수가 취약한 경영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나, 근로자에 비해 사회안전망 제도는 취약
-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공 약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회 계류 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4. 지역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물류사업을 확대 지원 하겠습니다.

□ 필요성

- 유통시장 개방 이후 신유통업태의 확산과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
- 이에, 중소기업체의 조직화·공동화를 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14개 지역에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나 현재 4곳만이 건립 완공 상태로 지방비와 민간사업비의 부담이 과중한 것이 부진의 원인
- 중소기업체의 공동구매, 공동배송, 공동판매를 위한 공동도매물류센터 개설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필요

□ 공 약

- 중소기업체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건립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물류센터 건립시 해당 지역의 낙후도, 지자체와 민간의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민자부담비율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국고30% : 지방비40% : 민자30% → 50 : 40 : 10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확충하여
누구나 일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5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3.7%이며 청년 실업률은 8%로 이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

- 청년 실업률은 02년 7.0%, 03년 8.0%, 04년 8.3%로 매우 심각한 상황

□ 공 약

- 청년멘토링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교수, 기업체, 졸업생 등을 재학생과 연계시켜 상호 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개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대학교, 실업계 고교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기능을 내실화하고 취업지원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력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수제도와 인턴제도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일회성 취업이 되지 않도록 지원제도의 상시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 인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멘토링 제도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적용을 우선 확대하겠습니다.
- 지자체, 경제단체, 국제관련단체 및 학교와 연계하여 청년들을 해외에 파견함으로써 국제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국제 전문가로 양성하겠습니다.
- 학교별 취업지원기구와 지역별 산업체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취업률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산업구조변화에 맞추어 중소기업, 기능대학,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동직업훈련체제로 변환하는 등 기능인력양성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고용인프라 구축, 취약계층의 취업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2.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나 제조업 기능직 중심이며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
-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구직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 부실
- 기업내 전직에 대비한 훈련프로그램이 대기업에 한정

□ 공 약

- 보다 나은 일자리의 이동을 원하는 근로자가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인력공급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전직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일정 수준의 근로자에게 학습을 위한 유급휴가 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인증제 및 자격증 제도를 개편하여 직업능력을 인증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연장할 수 있는 훈련연장 급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지자체 및 근로자 조직의 직업훈련, 직업소개를 지원하겠습니다.
- 다양한 전직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직자 훈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3.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 서비스를 늘리겠습니다.

□ 필요성

- 최근 소득 및 취업·기회 배분의 불균형으로 빈곤화의 문제가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
-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많은 분야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실직 근로빈곤계층이나 취업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소비성·일회성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 공 약

- 간병, 보육, 저소득층 급식, 재활용 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육성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를 중점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촘촘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전 국민 모두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보험료인상, 급여인하)은 연기금의 고갈 시기를 잠시 미루는 것에 불과함.
- 또한 납부예외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근본적인 노후보장제도가 될 수 없음.

□ 공 약

- 연금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여,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젊은 시절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노인이 되었을 때 지급받도록 하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과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사망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 부담이 아닌 국가예산으로 전액 부담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기초연금도입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소득비례연금은 신고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자신이 낸 만큼만 받아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해결 가능
- 국민연금가입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2.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엄격한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만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등 각종 급여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신용불량자 채무 유예, 주민세 비과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선정기준과 통합급여방식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 하더라도 명백한 빈곤위험에 처해 있거나, 주거, 의료, 자활 등 특정한 급여만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에 매우 비효율적이며, 이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 문제가 매우 심각함.

□ 공 약

- 저소득층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해당급여를 지급하도록 개별급여 보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자활지원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분리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대상층을 확대하여, 자활사업이 저소득층 실직자 및 불안정 고용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단위의 보편적 고용지원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활지원법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분리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40%까지 대상층을 확대하여, 누구나 과도한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급여법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 대상을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3. 선진화된 노인복지정책수립을 통해 활기차고 웃음 가득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필요성

- 의료기술발달 및 소득증가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2004년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2%인 약 421만명으로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4%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노인인구증가에 비해 노인복지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0.3%에 불과함(2005년 약 4천억)

□ 공 약

- 고령사회대비, 중·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중풍·치매를 비롯한 노인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 노인복지관·건강관리요원·경로당 활성화·노인요양서비스 등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노인복지대책 특위를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고령사회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노인복지법」 및 「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법안을 정비하겠습니다.
- 치매규정 신설 및 치매노인 실태조사,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치매의 날 제정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추진중에 있습니다.
- 지자체별 국, 공립치매·중풍병원 및 요양시설 설치 세부 확충안을 마련, 지역별 편차를 없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치매 및 중풍 노인환자를 비롯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고령자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구조 변화 및 노인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신규 일자리 개발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여가활성화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 실질적인 노인문화복지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통해 경로당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효장려지원법」을 제정하여 부모부양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마련하여 효사상

고취에 앞장서겠습니다.

-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 및 지킴이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등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 노인 교통수당을 인상하겠습니다
-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청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4.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사회를 통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필요성

- 현재 장애인구는 약 450만명으로 추산되며,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법률로 장애수당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 아직도 선진 OECD 회원국 중 장애인관련 각종정책, 예산, 장애시설 등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공 약

-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특소세, 부가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한 각종 시설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정보통신·시설이용·교통이동 등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백히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장애인기본법」 및 「복지법」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관련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필요성

- 소득 뿐 아니라 자산빈곤 문제도 매우 심각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하에서는 보충급여방식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참여 유인이 어려운 실정
- 아울러 통합급여방식(all or nothing)으로 인해 선정기준에서 탈락되면 모든 급여와 혜택이 한꺼번에 박탈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탈빈곤을 유인하는 데에도 많은 한계가 있음.

□ 공 약

-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근로활동 참여 유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정부가 matching하여 지원하는 방식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 근로활동 참여에 의한 소득에 따라 30% 이상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의 증가로 인해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일정기간 연장하여 급여를 지원해주도록 하는 「탈빈곤 이행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6. 어느 지역에서나 균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역간 복지 인프라가 매우 불균형
- 특히 도·농간 복지 인프라가 매우 불균형

□ 공 약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 분야별로 낙후된 지역을 “Welfare Zone”으로 지정하여 복지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방안

- 각 분야별로 욕구는 높으나 서비스나 시설이 낙후된 지역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동복지촉진지구(Child Welfare Zone), 노인복지촉진지구(Old Welfare Zone), 장애인복지촉진지구(Disability Welfare Zone)
- 각 지구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조세감면, 행정지원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7. 저소득층의 통신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필요성

-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은 생활필수품이 되었음. 그러나 통신료 부담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음.
 - 현재 통신회사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290만4천명), 국가유공자(20만5천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17만9천명) 등을 대상으로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를 면제하거나 부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공 약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복지혜택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현재 가족 구성원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14만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층가구의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60세 이상 노인 또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민보건의료시설 확충과 식품안전대책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공립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 필요성

- 건강에 대한 욕구가 저소득층, 노인 등 전 국민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공립병원 및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공립의료시설 부족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공 약

-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및 전문 의료진을 보강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 공공보건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예산을 늘리겠습니다.
- 발병이 잦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암에 대해 전 국민건강검진제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응급의료 수가를 개편해 응급의료기관의 적정급여를 보장하고, 응급의료 인력을 확보해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2.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필요성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불량식품 및 건강식품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식품·의약품 등의 제조·판매기준 강화 필요

□ 공 약

- 먹거리 및 각종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수입식품·의약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소비자중심의 식품안전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 식품기준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등의 국내 유입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식중독 등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의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자의 처벌기준 및 관리·감독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결식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는 달리 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부족
- 기업들이 문화·학원 등에 기부할 경우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결식아동을 지정해 기탁하는 것은 전무한 실정

□ 공 약

○ 결식아동에 대한 법인기부금을 100% 손비처리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 저소득층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공급을 보장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4년 斷電(단전) 경험 가구는 총 486,362 가구로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체납이 원인
- 정부의 단전가구에 대한 지원은 110W 소전류제한기 설치와 흑서기, 흑한기 단전 유예조치가 전부인 상황으로 단전 중 촛불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소중한 목숨까지 잃고 있음
-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전력(조명과 냉·난방) 공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해야 함.

□ 공 약

○ 저소득층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회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 및 전기사업자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 공급 노력 의무화
 - 전력요금 무상지원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출항목 개정

2. 장애인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장애인에 대해 전기요금과 LPG 승용차 연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난방비 관련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없음
- 특히,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2002년 기준 944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배관망의 확대로 인해 대표적인 서민연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는 미미한 실정
- 장애인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생계가 곤란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 약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회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규정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인요금의 보상 지원근거 마련

3.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제주도는 전국 광역자치도 중 유일하게 천연가스(LNG)의 도입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의 높은 연료비 부담은 물론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상존
 - 연간 약 720여억 원의 추가 연료비 부담과 단위발전소 또는 전력연계선의 고장시 제주도 전체의 정전으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 불가피(최근 10년간 26건의 정전사태 발생)
-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이 급선무

□ 공 약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도약을 위해 천연가스 조기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력공급 안정화로 제주지역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정부로 하여금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하겠습니다.
- 제주지역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년층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필요성

- 고연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함과 동시에 고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용안정

□ 공 약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고령자 인력시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임금피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금 산정의 불이익을 해소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국민연금법」 개정
- 임금피크제 이후 인력 활용을 위해 기업의 직무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 광역자치단체별로 고령인력에 대한 별도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필요성

- 장애인 의무고용제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많아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 공 약

- 장애인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장애인의 신규 채용에 따르는 비용과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편의시설, 장애인용 작업대 설치 등에 대한 세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특별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혜택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 필요성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확대 필요
-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복지격차가 임금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에 대한 혜택의 차이가 큼.

□ 공 약

- 비정규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사회보험이 모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저임금 근로자의 부족한 기업복지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법정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확대를 위한 적정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사회보험제도의 관리 운영에 노사단체가 참여하여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근로자의 회비에 비례하는 복지지원 확대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법정최저임금을 산업별 평균근로자의 50%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4. 취약노동계층을 위한 국선노무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필요성

- 취약노동계층(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장애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계층)에 대한 공적지원제도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
-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받는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1,454만여명) 중 11%(150만여명)에 불과
 - 전체 근로자 중 약 90%에 달하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조건, 해고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생계유지, 비용과 절차 상의 문제 때문에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권리행사에 제약

□ 공 약

- 취약 노동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선노무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임금 체불 문제 뿐만 아니라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임금, 근로조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노동분쟁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구조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노동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률구조공단에 국선노무사를 배치하겠습니다.
- 노동 관련 각종 사건을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민원인과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로서 행정기관의 노동 기본권 침해를 객관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 상담의 질을 높이고, 노동 관련 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소송 사건에서도 취약 계층의 승소율을 높이거나 억울한 패소를 줄이겠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모든 계층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탑(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청년 취업지원, 여성 취업지원 등 산발적·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킴. 또한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일자리 알선 수준에만 그치고 있어 개인별 특화된 고용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

□ 공 약

-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개인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센터(Job Support Center)를 설립하겠습니다.
 -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복지부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의 취업지원기능을 통합하고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 마련
 - 취업을 원하는 모든 계층에게 취업정보제공 및 상담, 개인별 특화된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안

- 고용지원센터(Job Support Center)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비를 대폭 절감하겠습니다

교육 선진화로 우리의 내일을 밝게 만들겠습니다.

1.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했던 교육 정보 이제는 공개해야 합니다.

□ 필요성

- 원인과 증상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는 것처럼 교육 정보 공개를 통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올바른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음.

□ 공 약

- 교육 정보의 투명화를 이루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학업성과 및 연구기초자료 공개를 통해 어느 학교는 무엇을 잘 하고 또 어느 학교는 무엇이 부족한지 투명하게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

2.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가 되도록 교육 격차를 해소 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교육은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실존하는 교육 격차를 마냥 외면한 채 하향 평준화 정책을 고집해 온 것임. 결국,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인사 및 행정 등 교육의 획일화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가로막고 창조력을 억눌러 국가경쟁력에 아무런 도움은 못 주면서 그저 우리들끼리 하향 평준화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제자리에서 맴돌 때 세계화는 멀어지고 있음.

□ 공 약

○ 자립도가 높은 학교에는 자율을 주는 대신 지원을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절약된 재원으로 저소득 지역의 학생과 학교에는 지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안」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교육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자율을 늘려야 할 학교와 지원을 늘려야 할 학교를 구분해 잘하는 학교는 더 잘하게 하고, 부진한 학교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개선

3. 자율형 학교를 도입하겠습니다.

□ 필요성

○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함. 노력하는 학교, 학생을 잘 지도하는 학교가 제대로 인정받아야 함. 그래야 공교육도 살아나고 대학입시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임.

□ 공 약

○ 학교의 특성과 건학이념에 걸맞는 자율을 보장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초·중등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학이 본연의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형 사학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최종 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 주고 이들 학교에 대한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맡김.

4. 대학의 학생선발 및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정부가 학교운영, 학생선발에 하나하나 간섭한다고 해서 입시문제가 풀리지는 않음.
사교육비,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규제들이 도리어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음.
-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가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필요한 정보를 숨기고, 고교마다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객관성이 결여 되어 대학은 내신성적을 불신하면서 분별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러한 대학을 협박하며 강압적으로 지시에 따르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 공 약

-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을 제고하고 자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대학입시의 최소한의 원칙만 제시하고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 선발

5. 교육비 부담을 반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 필요성

- 우리 사회 소비자 물가 인상의 최대 요인이 교육비라 할 만큼 각 가정마다 교육비로 인한 부담이 너무나 큼.
- 교육비 부담을 덜어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듦.
- 대학진학률이 81%인 우리 사회에서 높은 등록금 부담은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음.
- 사회양극화의 근본 대책은 국가가 교육에 대한 우선 투자와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서민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것임.

□ 공 약

-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가차원의 장학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 입법을 통한 장학기금 마련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제도 강화
 - 산학연계 강화와 인턴십 프로그램 다양화 및 대학생 멘토링 제도 도입 등 근로 장학제도 강화
- 개인학습계좌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군 사병 봉급을 인상하고 이를 대학등록금이나 직업훈련을 위한 평생학습 비용 지원으로 연계시키며, 여성의 경우 출산여성의 직업훈련 및 재교육 장려와 이를 개인학습계좌를 통해 지원
- 대학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사립대 기부금에 대한 10만원 세액공제 제도 도입
- 대학의 재원다양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고등교육재정지원 입법을 통한 포물러 펀딩 도입으로 합리적인 대학재정 확충과 지방대 및 취약계층의 고등교육지원책 병행
 - 연구비관리제도 개선, 간접연구비 30% 실시
 - 사립대의 각종 부가가치세 및 운영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재정지원을 학생 학자금 지원 및 대학재정구조 개선 조치와 연계
- 대학회계 제도 도입 및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책무성 강화 조치 등 대학운영이 투명화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물가상승률과 대비해 산출된 대학의 등록금인상 과표가 과도할 경우, 대학 홈페이지에 등록금 인상에 대해 각종 지출내역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공개와 대학의 재정건전화 노력(전입금 및 학생지원 등) 및 계획을 게재토록 하고, 필요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 입법
 - 이원화된 재정운영을 일원화 하는 대학회계 제도 도입(현재 교육위에 제출된 국립대재정운영특별법 통과 강력 추진)
 - 대학 예산계획 수립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적정교육비' 산출 및 공개 의무화
-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줄여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새로 발굴된 세원은 고등교육 강화에 우선 사용하겠습니다.
 - 참여정부 이후 정부조직 비대화 및 경직성 경비 증가, 불필요한 조직의 경상경비 10% 이상 감액 등을 통한 재원 확보 가능
 - 국가차원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각종 건설폭리 세원 확보는 저소득층 인적자원 개발사업 투자로 환원
- 고등학교 의무교육 단계적 추진

6. 백년을 내다보는 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성

- 조령모개식의 즉흥적이고 땀질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개혁을 이뤄야 함.
- 교육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현실을 감안하여 단기간에 급조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공 약

- 100년을 이끌어갈 교육 대타협안을 만들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교육다양화 3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① 교육정보 공개 및 격차 해소

- 경제난이 심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어려운 현실에서 국가는 소외 계층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자율형 학교 육성

- 21세기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보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수요자인 주민이 선택하는 다양한 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사립 학교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③ 대학입시 자율화

- 대입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평가되도록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 혁신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

- 지역의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국가의 관치교육을 타파하고 각 지역마다 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지원 역량과 지역 주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② 교원평가제

-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교원 평가 방안을 입법화 하겠습니다.

③ 교과서·교육과정 선진화

- 21세기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공교육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여 교육수요자가 주도하는 교육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세계적인 이공계대학을 육성하고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1. 세계적인 이공계 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 필요성

- 우수한 기술인력 1명이 10만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 이공계 인력의 집중 육성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
- 우수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 이공계 대학을 육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견인할 첨단인력, 기업맞춤형 인력을 배출하는 요람으로 활용

□ 공 약

- 우수 이공계 대학을 연구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집중 지원·육성하겠습니다.
 - 수도권 및 권역별 선정
- 우수 이공계 대학의 우수학생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하여 초일류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우수 이공계 대학 학생에 대하여 전 학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생활비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우수 이공계 대학에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2. 이공계 대학의 교육이 산업현장과 밀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재 이공계대학의 교육과정은 산업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산업현장 밀착형 인재를 육성해야 기업이 채용 후 재교육시키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공계생의 취업률도 높일 수 있음.

□ 공 약

- 산업계 밀착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이공계 대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산업계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공계 대학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등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 매년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내용을 기업들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필요성

- 5년, 10년 후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 지난 김대중정부에서 도입한 연구성과중심제도(PBS:Project-Base-System)로 과학기술인들이 연구보다는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하는 등 연구환경이 매우 열악해짐.
 - 국가 연구개발(R&D)예산 배분의 문제는 연구자들의 연구비 확보경쟁을 일으켜 황우석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함.

□ 공 약

- 정부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인들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단기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연구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 PBS(Project Base System)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석·박사급 연구보조자들의 임금을 상향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본 인건비 지원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석·박사급 연구보조자들의 임금을 최저 월 1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을 서울같이 상향 평준화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천하고 경쟁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1. 중앙정부 권한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되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은 세계적 추세
-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위주의 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음.

□ 공 약

- 실질적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 추진시한을 명시하여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지방분권관련법」을 「지방분권촉진특별법」으로 단일화하겠습니다.
 -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명확한 구분과 법령정비기간의 명시, 국가사무의 포괄적·일괄적 이양계획과 추진실적의 공표, 자주재원 확충 보장,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경찰제 도입 및 추진기구의 일원화등의 규정 마련

2.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지방정부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 공 약

-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정부의 지방세 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재정진단제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지방공기업 경영을 혁신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지방세의 세율조정권 및 세목결정권 등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겠습니다.
-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 및 경영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3.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방의원 유급제가 예산낭비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활동 활성화

□ 공 약

-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례제정범위와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영리 금지 규정을 제정하여 윤리성을 높이겠습니다.
- 지방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의회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겠습니다

4.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율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공 약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행정의 중심이 되어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교육재정의 대폭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 주민자치를 더욱 내실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구청, 동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의 역할을 주민자치와 복지 향상에 맞춤.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보호

□ 공 약

- 일선행정기관이 사회안전망과 주민자치,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봉사 보호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주민자치를 통하여 필요한 수요에 복지를 공급하는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순찰대 등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주민의 여가활용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인증제도 도입, 소득세 공제, 면허세, 주민세의 할인, 실비제공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지정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2. 주민소환제 도입 등 의회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지방행정의 내부적 통제방식 필요

□ 공 약

- 주민자치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광주 첨단과학단지가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되도록 기반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 필요성

- 부산, 인천, 광양 등 지방의 해양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육성되고 있으나, 대구, 광주 등 내륙의 중심축들은 전략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내륙의 삼각축인 대전-대구-광주 중 대전은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되었으나, 대구-광주는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되지 못해 대구 테크노폴리스, 광주 첨단과학단지를 통해 과학기술 도시로 뻗어가려는 대구, 광주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악화되고 있음.

- 내륙 중심지역의 연구개발(R&D)특구 지정은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함.

□ 공 약

- 대구 테크노폴리스, 광주 첨단과학단지를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의 연구센터, 공공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연구개발(R&D) 융합형 도시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 R&D 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쾌적한 삶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집값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뉴타운 등 기존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겠습니다.

□ 필요성

-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주택, 교통, 환경 등 생활여건의 차이가 심화되어 각종 도시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현행 제도로는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로 주거환경을 원활하게 개선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기존도시에서 주택공급 확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공 약

-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50%를 국가가 보조토록 제도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추진방안

- 소위 뉴타운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필요성

- 경제원리를 무시한 참여정부의 수요억제 정책과 세금폭탄 부과 등 주택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음.
 -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무너지고 있음.
- 다양한 규모의 주택, 여가시설, 사회 간접자본 등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필요
 -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잠재수요, 강남지역에 대한 대체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전체적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

□ 공 약

- 집값 폭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도시 건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향후 10년간 건설할 주택건설의 입지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제3기 신도시 계획을 조속히 만들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저해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겠습니다.

3.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렌탈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 필요성

-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소형위주로 구성되어 저소득층 밀집단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져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향후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젊은층과 서민들에게 실버타운과 같은 품질이 좋고, 평수가 다양한 임대아파트 공급 필요
-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정착시킴.

□ 공 약

- 젊은층과 서민의 기호에 맞는 품질이 좋고 다양한 평수로 이루어지는 ‘전용 임대 아파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렌탈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렌탈타운법」을 만들겠습니다.

4.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 정책을 위해 후분양제를 조기에 정착 시키겠습니다.

□ 필요성

- 선분양제는 건설업체 재산성 악화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하는 현실에서는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후분양제는 주택가격 폭등의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된 분양권 전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책 개선 필요

□ 공 약

- 소비자가 원하는 후분양제를 우선 공공부문부터 실시하고 민간부문으로 점차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공공부문은 2006년부터 실시하여 2010년에 완전히 정착시키겠습니다.
- 민간부문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되,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사업자에게는 국민주택 기금을 우대 지원토록 하고,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후분양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안전 및 재난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1. 지역에 맞는 버스교통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필요성

-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 지하철의 확충 등으로 버스 수요가 감소하여 버스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 기존 정책으로는 버스업체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를 지방대도시에서도 활용하여 이용

자 편익을 도모할 필요성 증대

- 교통체계 개선 및 버스고급화 등 서비스 향상 필요

□ 공 약

○ 지방에 맞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추진방안

○ 농어촌 지역은 버스운행 기초서비스를 개선하고, 도시지역은 교통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대기오염을 줄이는 CNG 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 운전사와 정비사의 교육내용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접도시와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광역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2. 교통안전 및 교통재난 방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재 철도, 항공, 도로, 교량 등 교통안전 관련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사고별 대응 능력이 떨어진.

○ 교통사고 유형별로 대응 매뉴얼 제작과 통합시스템을 갖춘 조직 운영으로 교통재난 최소화 대책 필요

□ 공 약

○ 교통안전 및 교통재난 방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사고예방 및 사고유형별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교통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사회를 가꾸겠습니다.

1.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으로 소모적 갈등을 없애겠습니다.

□ 필요성

-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 확대
-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추진

□ 공 약

- 환경보전과 개발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 친환경 상품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녹색GDP 개념을 도입해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 추진방안

-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을 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국토 개발 사업시에는 이해당사자간(지자체-지역주민-환경단체)의 활발한 사전합의를 거쳐 공사지연이나 중지예 따른 갈등과 불필요한 재정 소모를 방지하겠습니다.
- 환경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친환경상품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06년은 환경부가 선포한 ‘환경보건원년’ 인바, 선언적인 국민의 환경권선언에 안주하지 않고 녹색 GDP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질, 대기 등의 환경기준을 강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환경 생태축을 보전, 복원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필요성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축의 보전과 복원 필요

□ 공 약

- 전국 주요 생태계의 보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무계획적인 도로와 고속도로 개발로 인해 생태축이 끊겨진 곳에는 에코브리지를 설치, 야생동물이 사람과 함께하는 생태학적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 '생물종다양성국제협약(CITES)'의 구체적 이행을 통하여 다양한 생물종의 보전과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한국토종 종의 산업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 2008년 람사총회 유치를 확정지은바 갯벌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습지, 우수한 삼림지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 국립공원의 휴식년제를 확대하여 훼손을 방지하겠습니다.
-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미군의 오염 치유부담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3. 도심 속의 공기를 더욱 맑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 필요성

-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각하며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 필요

□ 공 약

- 대기환경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보육시설, 열차, 지하철 등 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자동차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기준과 연료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차량운행의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황사정보, 오존정보를 제때에 발령하고, 대기측정망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오염예고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사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중일 국제 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화물차 오염저감장치 부착사업과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제도를 전국으로 조속히 확대하고 이를 시행한 국민들에게 환경부담금면제, 자동차 정밀검사 면제등의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4.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 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갈수록 수자원 오염이 심각해지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관리 강화 필요

□ 공 약

- 먹는물 수질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고 상수도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량하겠습니다.
- 폐수 정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지역별 수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지역별로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가보조를 강화하겠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먹는 샘물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지방상수도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 구역 단위에 국한하지 않고 수도사업자들간에 지방상수도업무를 상호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원보호지역의 지역주민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4대강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상수원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적 지역발전방안이 포함된 ‘지속가능한 상수원지역개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필요성

- 제품의 생산, 판매, 폐기에 이르기까지 자원에 대한 계속적 관리로 폐기물 발생을 차단

□ 공 약

- 폐기물에 대한 자원 재활용 비율을 높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상품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전국의 재활용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폐기물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친환경상품의 생산, 판매,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 한나라당에서 이를 위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상태
- 폐기물 부담금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부담하는 폐기물부담 준조세를 누진적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 환경친화적 설비와 청정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겠습니다

농·수산업 활성화 및 세계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 FTA(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상에서 농어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FTA 협상과정에서 국내 농업 부문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만큼 통상협상 과정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국내농업 보호를 위하여 범국가적 대책 조치가 절실

□ 공 약

- 통상협상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공개적인 협상을 전개하도록 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농업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한·미 FTA 통상협상에서 농어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3자협의체 (정부·국회·농민단체)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농·축·수산물의 유통체계 개선 등 품질경쟁력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필요성

- 땀 흘려 수확한 농축수산물 이익이 농어민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농축수산물 선진유통체계 확립이 필요
-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시설원예농업 등의 경영비용 증가 및 소득감소 대책 절실

□ 공 약

- 생산자는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수산물을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 과수산업 및 원예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면세경유가격(원/ℓ) : 99년 356 → 02년 365 → 04년 487 → 05년 10월 638, 02년 대비 75%인상

□ 추진방안

-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등 온-오프라인 유통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과수산업 및 원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효율 난방기, 피복재·보온재, 환경조절시스템 등의 시설 및 개보수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 지속적인 항만 시설 확충을 통하여 동북아 물류 허브(Hub)를 구축하겠습니다.

□ 필요성

- 상해 양산항 개장 등 물류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국내 항만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 확충 필요
- 동북아 국제 물류·비즈니스 중심항만 구축 필요

□ 공 약

- 부산-광양 양대 항을 집중 개발하여 세계5대 해운항만 강국으로서의 도약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 부산신항이 동북아 국제 물류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주변지역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부산신항에 대한 첨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광양항만 구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민의 불편해소 방안 및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고령 영세소농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하겠습니다.

□ 필요성

- 전체 농가 중 1ha 미만의 영세소농이 61.8%를 차지
 - 전체 농가 중 60세 이상 노령농가 비중은 59.2%
 - '04년 1ha 미만 농가의 소득은 20,68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소득 37,361천원의 55.4%
- 농가의 빈곤율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3배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빈곤율 추계치('01년) : 농가 11.8%, 도시근로자 4.4%

□ 공 약

- 고령 영세농을 대상으로 농촌형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고령 영세소농에 대한 특별 소득보조금 지급을 통해 1ha 미만 농가에게 소득보전 직불제의 고정직불금 1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경우 추가되는 예산 규모는 2,840억원

2.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최근 이상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공 약

- 자연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강화하겠습니다.
- 자연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기회생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자연재해 예방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 침수대비 배수개선담을 확대하겠습니다. (05년 68.9%→07년 73.4%)
- 재해의 복구와 지원은 “선집행 후정산”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재해보험 가입률(05년 23.4%→08년 26.0%)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 조류·가축질병 검역예방 활동 강화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유입 차단 및 국내 농장 단위에서 소독 및 예방활동 강화 필요
- 국민의 식생활 안전 대책 필요

□ 공 약

- 가축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강화로 축산업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역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에 대한 강력한 검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국경 검역활동 강화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악성 가축 질병 발생시 가장 중요한 초동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지역별 검사소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4.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 필요성

- 농어민의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복지 혜택 수여가 열악한 상황임
- 농어촌 거주민들의 정보소외계층이 없도록 농어업인을 위한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필요

□ 공 약

- 농어촌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확충으로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컴퓨터 반값 지원 및 인터넷 정보이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 학교 급식비를 반값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영세 노령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농어촌 산간·오지지역의 초고속인터넷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5. 감척 대상 어민 대책과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필요성

- 감척사업으로 생계기반을 잃은 어민들에 대한 대책 필요
- 대내외적인 어업여건의 악화로 어촌관광 활성화 같은 적극적인 어업외 소득원의

개발 필요

□ 공 약

- 감척 대상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감척 폐업지원 국고 50%, 융자 30%, 자부담 20%)
- 감척으로 인해 실직한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촉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관광 정보센터”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일반감척 폐업시 어민들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기획 예산처 규칙 개정)
- 어촌관광 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 지방교부금 개선을 통해 농촌지역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 필요성

- 주민등록표에 의한 인구수로만 지방재정소요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
 - 농촌 지역은 인구가 희소하여 1인당 또는 가구당 지자체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
- 농촌지역에 대한 지역균형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가 곤란하여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공 약

-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균형 소요액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역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수 산정시 인구밀집도를 반영하여 보정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7.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유아의 보육비를 확대·지원하겠습니다.

□ 필요성

-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노동과 가사노동 및 자녀교육 등 어려운 여건과 도시생활과의 격차로 전반적 사기저하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개선 시급
- 영·유아 보육여건 미흡 및 출산 후 양육부담으로 젊은 층의 출산 기피 및 탈농 심화
 -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필요

□ 공 약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 미만 농어가에 일손돕기 지원 사업 등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비를 확대·지원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일손을 털어 줄 ‘여성농어업인 일손돕기’,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 미만 농어가에 영·유아 양육비(보육료·교육비)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